

- **참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시간	내용
주관 세션 (2월13일) 학회세션 IV 11:20~13:00	<p>주제: 초저출산 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과 전략</p> <p>좌장: 김태헌(한국교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연설) 초저출산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 건강한 출생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 (한정열, 단국대) • 미래사회의 주역, 영유아 돌봄·교육 통합 지원정책 (최일선, 경인교대) • 출산·육아 친화적 기업과 사회환경 조성 방안사각지대 해소 중심으로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p>토론: 강민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선(순천향대), 김영화(경북대)</p>

- **참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갈등학회,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한국통계학회, 국회미래연구원

시간	내용
주관 세션 (2월13일) 학회세션 IV 11:20~13:00	<p>주제: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의 방향과 대안</p> <p>좌장: 은재호(한국갈등학회 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를 통해 본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현황과 과제 (정서화, 한국행정연구원) • 데이터 기반 통합정책관리 방안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생산성 경쟁력 확보(김영미, 상명대) • 미래예견 가능성 제고를 위한 표준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송용찬, 중앙대) <p>토론: 김유빈(국회미래연구원), 김영원(한국통계학회 회장), 이승희(금오공대), 박희봉(한국공공관리학회 회장)</p>

Contents

□ (기조연설) 초저출산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1
□ 건강한 출생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 (한정열, 단국대)	15
□ 미래사회의 주역, 영유아 돌봄·교육 통합 지원정책 (최일선, 경인교대)	25
□ 출산·육아 친화적 기업과 사회환경 조성 방안사각지대 해소 중심으로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37
□ 빅데이터를 통해 본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현황과 과제 (정서화, 한국행정연구원)	45
□ 데이터 기반 통합정책관리 방안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9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생산성 경쟁력 확보 (김영미, 상명대)	77
□ 미래예견 가능성 제고를 위한 표준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송용찬, 중앙대)	89

□ 회의개요

- **참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배경과 목적** :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아 육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포용적 사회 형성을 위한 역할 모색
- **개최장소** : 제4회의실(호텔신관 2층)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주관 세션 (2월13일) 학회세션 IV 11:20~13:00	<p>주제: 초저출산 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과 전략 좌장: 김태헌 (한국교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연설) 초저출산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 (백선희, 육아정책연구) • 건강한 출생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 (한정열, 단국대) • 미래사회의 주역, 영유아 돌봄·교육 통합 지원정책 (최일선, 경인교대) • 출산·육아 친화적 기업과 사회환경 조성 방안사각지대 해소 중심으로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p>토론: 강민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선(순천향대), 김영화(경북대)</p>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초저출산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과 전략

2019.2.13.11:20-13:00

육아정책연구소 주관,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

〈기조연설〉

초저출산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

백 선 희

육아정책연구소장

〈목차〉

- I. 육아의 사회화, 진화의 필요성
- II.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의 변천
- III. 육아정책 주요 환경의 변화
- IV. 육아지원정책을 넘어서,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

1. 육아의 사회화, 진화의 필요성

1. 육아와 육아지원정책

2.육아의 사회화, 주체들의 역동

- 3 -

1. 육아와 육아지원정책

○ 육아(育兒)

- ‘어린이를 돌보아 기르는 것’

‘보통 신생아부터 취학 전의 어린이까지가 그 대상’(다음 백과사전)

- ‘(전통사회의 육아도) 크게 가정에서의 육아와 제도적인 측면으로 구분’

‘태어나서 6, 7세까지의 이 시기는 모든 신체적·지적·정서적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어린이의 몸과 마음의 성장에 장애를 주는 요인을 없애주고 순조로운 성장을 도와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

‘태교, 출산, 유아기(乳兒期), 유아기(幼兒期)까지의 신체 발육과 정신 발달에 수반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다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육아는 •가정(비공식영역)과 제도(공식영역)를 통해, •임신, 출산, 영아, 유아기의
•모든 성장의 장애를 없애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주체-대상-활동)

- 4 -

○ 육아지원정책

- 공식적, 제도적 영역
- 정부가(정책의 주체), (가정에서의)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 ‘육아지원정책’ 용어의 공식적 사용

- 참여정부 육아지원정책의 배경: ‘육아문제, 사회 공동의 책임이다’라는 인식
 - 대선 공약: “자녀를 낳기만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양육을 지원 하겠다”
- 대통령직속,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4년 ‘제1차 육아지원정책 방안’ 발표
 - 육아지원을 전 국민 대상 공공서비스로 자리매김, 포괄적 접근
 - 대상: 0세~8세(초등 저학년)까지
 - 주요 내용: 육아휴직, 보육, 유아교육, 초등 방과후정책
- * 이후 육아지원정책 용어 확산. ‘육아정책’ 용어 병행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육아지원정책을 간략히 부르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음

- 5 -

2. 육아의 사회화, 주체들의 역동

○ 육아의 사회화

- 육아를 전통적 방식인 부모(가족)의 책임으로 두지 않고, 육아의 일부를 사회(특히 공식 제도)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
- 대표적인 육아의 사회화 정책은 정부의 보육정책(Child care)
 - 유아교육정책(유치원)도 육아의 사회화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 전통적으로도 육아에는 ‘교육’의 의미 포함
- ‘육아의 사회화’에서 사회화, 또는 사회적 책임의 정도는 그 사회가 결정
- 육아의 사회화를 ‘육아 행위자’와 ‘그 행위자들의 책임(역할)’ 차원에서 접근 필요

-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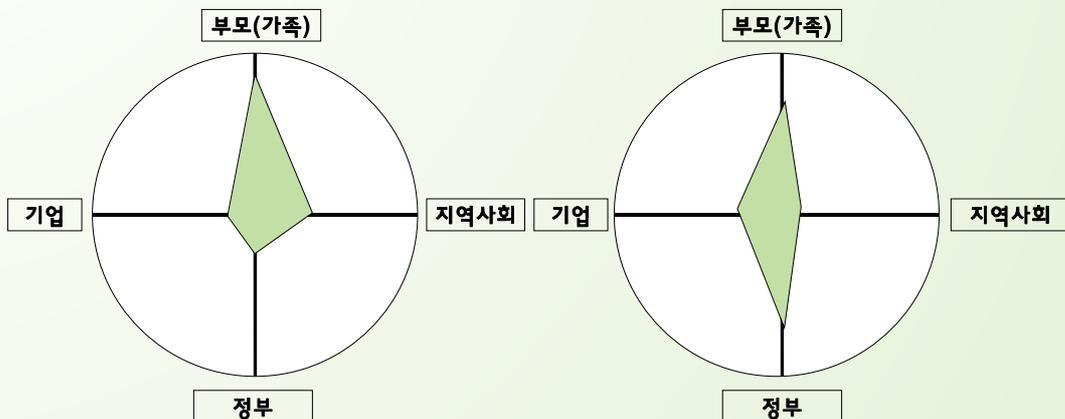
○ **육아의 사회화: 행위자들과 그 책임의 역동**

- 육아를 하는 행위자(주체)들의 확대 필요
 - 전통적 주체: 부모와 그 가족
 - 제도적 주체: 정부
 - 그 외 경제주체인 기업과 공동체 단위의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 부각되어야

- 다양한 주체들의 등장과 책임은 아동에 대한 인식 및 책임과 연계(예)
 -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다, 육아의 1차적 책임은 부모이다(부모 역할의 강조)
 - 아동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이다 등(정부 역할의 강조)
 - 육아(아동)는 여성노동력 확보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등(기업 역할의 강조)
 -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 한 마을이 필요하다(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강조)

⇒ 부모와 정부의 역할 강조만으로 한계, 다양한 육아주체의 등장 필요

- 육아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분담 정도의 예 (Care Diam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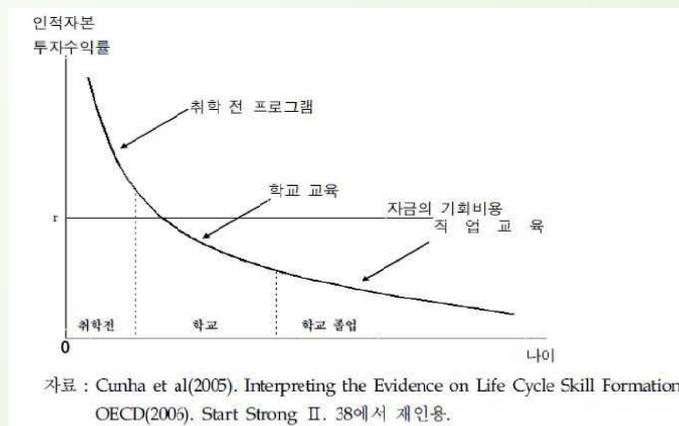
○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이유

- OECD(2006)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가족의 일-가정생활 조화 지원
 -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처
 -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가난과 차별의 금지
 - 모든 영유아들의 건강, 영양, 안전 보장

- 영유아보육과 교육은 공익에 기여(OECD, 2006)
 - 보편적인 아동의 건강, 미래 교육적 성취 효과, 시장 활성화, 사회적 단결 등

- 영유아기 투자, 수익률 가장 높음
 - 노벨경제학상 받은 Cunha & Heakman(2005):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 전 생애에 걸친 배움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시기

<연령에 따른 인적자본 투자수익률 >



- 유아기 1달러 투자는 전생애 걸쳐 7.16달러 절약 효과(Smith et.al., 1995)

II.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의 변천

1. 육아지원정책 이전(~2004)
2. 육아지원정책 이후(2004~)
3. 현재 육아지원정책의 한계

- 11 -

* 2004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육아지원정책'이라는 용어를 최초 사용하였기 때문임

1. 육아지원정책 이전(~2004)

- 근대 관련 법 제정 이전
 - 1921년 서울 기독교태화사회관, 탁아프로그램
- 1961년 아동복지법 제정
 - 구빈적 성격에서 아동복지 증진 노력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
- 1987년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탁아제도 도입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1차 전환점
 - 단순 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 저소득층 맞벌이 중심(법 목적)

- 12 -

2. 육아지원정책 이후(2004~)

- 참여정부, 저출산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채택
- 2004년 대통령직속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제1차 육아지원정책 방안' 마련
 - '육아지원정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최초 사용
 - 참여정부 육아지원정책 방안 마련의 배경: "육아문제, 사회 공동의 책임이다"
 - ①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영유아: 자녀 돌봄(보호)을 넘어선 발달과 교육의 지원
 - ②여성경제활동 늘려야 한다: 여성취업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부담'(여성부, 2003)
 - ③저출산, 세계 최하위 출산율: 2005년 1.08(역대 최저치)
 - * 2006년 합계출산율: 한국 1.13, 일본 1.32, 독일 1.34, 프랑스 1.98, 영국 1.80
 - * 고령화 속도: 고령화사회→(18년)→고령사회→(8년)→초고령사회
-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부 개정
 - 모든 아동 대상, 보육의 질 제고(자격증제도, 평가인증제도, 표준보육과정 도입)
-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 독립법 체계 마련

- 13 -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흡수. 12개 관계부처 장관 등
 - * 2005년 당시 기혼여성(20~44세)이 선호하는 출산·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 양육(교육)비용 지원(35%) > 일-가정 양립지원(24.6%) > 보육-육아인프라지원(16.9%) -임신·출산관련 지원(13.6%) > 기타 (2.4%)
- 2006년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새싹플랜) (2016~2010)
 - 보육료차등지원(소득계층별), 보육시설평가인증·보육교사자격증·표준보육과정 도입 등
-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6~2010)
- 2006년 이후
 - 2009년 아이사랑플랜(2009~2012): 양육수당 도입
 - 2012~13년 영아무상보육(정부지원단가 기준) 및 유아 무상누리과정 도입
 - 2013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3~2017): 무상(정부지원단가 기준)보육
 - 2017년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8~202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 14 -

○ 2018년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 과제 발표: 영유아 부문 주요 정책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 보육·교육서비스: 국공립 영유아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격차 해소
- 가정양육지원: 아동수당 도입, 아이돌보미사업 확대 등
-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 저출산-고령화정책의 강조: 국가 4대 핵심복합과제

○ 2019년 아동수당 도입 => [서비스정책 + 시간정책 + 현금정책]

3. 현재 육아지원정책의 한계

-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보다 다양한 정책, 꾸준한 재정투자 증가하고 있지만,
- 기존정책 패러다임으로는
 - 초저출산 위기 대응 부족: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정책 필요
 - 정책 많으나 분절적 접근: 정책 체감도 및 효율성 높일 필요
 - 불평등 심화 대응 부족: 보편적 접근 강조 속에서 불평등 지속, 육아취약가구 지원 필요
 - 보육·유아교육만으로 사회변화 대응 부족: 미래사회 변화까지 예측, 적극적 조치 필요

- 15 -

III. 육아정책 주요 환경의 변화

1. 인구사회환경: 초저출산과 정책 패러다임
2. 사회정책비전: 포용적 복지국가
3. 미래사회환경: 4차산업혁명과 지속가능성

- 16 -

1. 인구사회환경: 초저출산과 정책 패러다임

- 18년째 지속되는 초저출산(1.3명 이하)... 괜찮은가?
 - ‘합계출산율’이라는 숫자에 매달리지 말자, 의미 없다는 주장
 - ➔ ‘합계출산율’은 단순 양적 지표가 아닌,
‘출산 양육이 어려운 사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질적 지표’
 - 저출산이 어쩔 수 없는 추세이므로, 이젠 저출산 사회에 적응하자는 주장
 - ➔ OECD 평균 수준 1.7명
우리나라는 18년째 초저출산, 세계 최저 0.95명은 매우 심각(2018년 3분기)
-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보다는 삶의 질 강조’.... 적절한가?
 - 임신·출산·육아의 강조에서 삶의 질 강조는 ‘저출산 원인의 복합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 그러나 저출산 관련, 핵심 정책 대상과 영역 설정은 필요
 - 출산율을 목표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 그러나 정부는 출산율 관리하면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정책 대응해야

- 17 -

2. 사회정책비전: 포용적 복지국가

- 2018년 9월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발표
 -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 혁신적 포용국가
 - * 사회정책 강화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
 - 3대 비전: ①사회통합 강화, ②사회지속가능성 확보, ③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 주요 전략
 - 사회통합 강화: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전략2) 등
 - 사회지속가능성 확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전략5) 등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인적 자본의 창의성, 다양성 증진
- 현재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과의 관련성
 - 영유아와 그 부모들에게 형평성 있는 기회와 권한이 불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가?
 - 영유아와 그 부모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충분히, 공공성 있게 제공되고 있는가?
 - 영유아를 미래 시민으로 성장시킬 충분한 보호, 발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 ➔ 기존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육 중심의 서비스와 일-가정 양립정책 프레임으로는 부족

- 18 -

3. 미래사회환경: 4차산업혁명과 지속가능성

○ 4차산업혁명은 노동, 생활, 육아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노동: 노동의 유연화(고용형태, 노동시간, 작업방식, 작업 장소 등), 재교육 필요 등
- 생활: 개인 시간/생활 강조, 스마트시티(과학기술-주거 결합), 빅데이터/디지털화 등
- 육아: 여성노동시장 더욱 활발해지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일과 육아 등

○ 미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무엇에 투자하여야 하는가?

- 인구구조의 선순환: 영유아-청년-장년-노년세대의 유기적 생태계
- 미래 시민(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이들이 주역이 되는 30년 후, 완전히 다른 사회
- 기존의 일-가정 균형에서 '일-가정-생활'의 균형 강조: 개인의 행복 중요성 증가
- UN SDGs 미래지속가능목표



IV. 육아지원정책을 넘어서 ‘육아정책’ 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

1. 기존정책의 한계와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2. 새로운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목표와 특징
3. 새로운 ‘육아정책’의 과제와 핵심정책 제안

1. 기존정책 한계와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 기존 육아지원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육아정책’의 방향

구분	전환의 방향
육아책임	• 부모(가족) 중심(국가 지원) → 사회 공동: 부모, 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정책관점	• 성인(부모) 중심 → 아동중심(Children First)관점, 가족관점으로 확대
정책주체	• 중앙정부 중심 → 중앙 및 지방정부 협력
정책대상	• 육아 대상자: 0~5 영유아 중심 → 육아 대상자 + 육아공동책임주체
정책접근	• 생애주기적(시간) 서비스 접근 → 공간정책(예, 지역사회) 결합 • 분절적 정책 → 유기적, 통합적 정책 • 직접 관련 정책 → 직접 + 간접 영향 정책으로 확대
전달체계	• 공공영역 중심 → 공공 + 민간영역 확대
재정조달	• 공공영역 중심 → 공공 + 민간영역 확대
시간범주	• 현재 시점 정책 → 미래 시점 정책의 결합 (정책 효과 20~30년 지속)

- 21 -

2. 새로운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목표와 특징

○ 육아정책의 의미

- 육아지원정책과 ‘육아정책’
 - 육아지원정책: 정부가 부모(가족)의 양육 책임을 지원한다는 의미 강함
 - 육아정책: 정부가 육아의 공동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 강조

- 육아지원정책과 ‘양육지원정책’
 - 양육지원정책: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의미로 사용
 - ‘양육’: 비공식 영역에 있는 부모의 행위에 초점(child-rearing)

- ‘육아정책’과 ‘양육지원정책’과의 관계
 - 육아정책은 (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지원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

- 22 -

○ 새로운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관점과 목표

- 관점의 전환: 성인(여성) 중심 → (아동중심) → 아동중심의 가족관점
 - 성인 중심에서 아동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주장 있음
 - ‘육아’는 기본적으로 그 대상(자녀)과 행위자(부모 등)의 관계에서 시작됨
- 목표의 전환: 육아의 경제적, 비경제적 어려움 경감
 - 아동과 양육자(부모)의 삶의 질 향상(아이 행복, 육아 행복)

○ 새로운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주요 특징

- 정부역할의 전환: 지원자 → 주체자
- 정책대상의 전환: 아동, 부모 → 아동 및 육아 공동책임주체(부모, 정부, 기업, 지역사회)
- 정책접근의 전환: 생애주기적 분절적 서비스 → 시간-공간-활동(서비스) 융합적 정책
- 정책영역의 확대: 서비스-비용-시간 정책 → 서비스-비용-시간-‘공간’ 정책
- 정책성격의 전환: 소극적, 사후적 접근 → 적극적, 예방적, 환경적 접근
- 정책주기의 전환: 5년 단위 계획 수립 → 30년(한 세대) 미래 시점 고려한 계획

- 23 -

3. 새로운 ‘육아정책’의 과제와 핵심정책 제안

○ 육아정책 대상의 확대: 아동과 육아 공동책임주체

- 육아 대상자: 태아(임산부)~초등학생
- 육아 공동책임주체
 - 가족: (예비) 부모 등 가족
 - 정부: 정부 및 국가정책의 제공기관(어린이집·유치원 등)
 - 기업: 기업 및 자영업
 - (지역)사회: 시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주체

○ 육아정책 내용의 확대: 돌봄·교육·출산(난임)·육아휴직 → 책임주체별 포괄적 정책

- 아동 대상: 아동의 돌봄-교육-보건-복지-문화 통합적 삶 고려한 포괄적 정책
- 가족 대상: 부모역할, 일-육아-생활 조화, 취약가구 지원 등 관련 정책
- 정부 대상: 관련부처와의 정책 조정, 지방정부의 육아정책 지원 등 관련 정책
- 기업 대상: 일-육아(가정) 양립지원과 육아친화적 직장 문화 등 관련 정책
- (지역)사회 대상: 육아친화적 공간(지역사회) 조성, 참여 및 조직화, 문화 지원정책

- 24 -

○ 기초단위에서의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정책 간 융합과 효과적 전달체계

- 중앙정부 주요 정책
 - 돌봄/교육: 영유아보육(보건복지부), 유아교육(교육부), 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 초등돌봄(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동육아나눔터(여성가족부), 직장어린이집(고용노동부)
 - 고용정책: 육아휴직제도(고용노동부), 부모휴가제도(고용노동부), 청년고용(고용노동부)
 - 보건정책: 모자보건사업(보건복지부), 임신부 지원사업(보건복지부)
 - 주거정책: 신혼부부주택 등 공공주택정책(국토부) 스마트시티(국토부)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방부 등도 관련 정책 있음
-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 및 전달체계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의 주요 관련 정책(교육, 복지, 보건, 문화 기관 등)
 - 지방단위에서의 주요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협의체: 사회보장협의체, 돌봄협의체 등
- 지역단위에서의 주민의 자발적 참여 기회
 - 정책 기획, 추진,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 보장과 자발적 활동 지원 등

- 25 -

○ 새로운 육아정책 추진방법: 기획~평가까지 아동권리 기반 육아친화적 정책 접근

- 기존 친화적 환경조성의 예: 아동친화적 환경, 여성친화적 환경, 가족친화적 환경 등
- 기존 아동친화 도시: 00 NGO 기관의 10가지 원칙을 준거로 지자체 인증
 - 유럽 선진국의 경우, 아동친화도시는 **지자체 주도적으로 기획, 집행, 평가**
- 지자체의 아동권리에 기반한 육아친화적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관련
 - 기획: 모든 정책을 아동권리기반 육아친화적으로 검토 및 설계
 - 영역: 육아정책 이외 모든 경제, 환경, 교통 정책 등에도 적용
 - 수행: 핵심 육아정책 외에도 지자체 정책들을 아동권리 기반, 육아친화적으로 접근
 - * 핵심 부서에서 다 부서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체계성, 통합성 증진
 - 평가: 아동권리 기반 육아친화지표 통해 지역사회환경과 정책 평가 및 환류
 - 주민 참여: 아동과 육아 당사자들의 지역사회 정책, 사업 등에 참여 보장
- * 기존 가족친화 접근과의 관계: 가족친화와 분리된 것이 아닌, 아동권리, 육아환경을 보다 강조

- 26 -

○ 새로운 육아정책의 제안(예): 시간-공간-활동의 융합 ‘육아친화 스마트시티’

- 사용할 수 있는 유사 용어: 육아친화 마을, 육아친화 지역사회, 육아친화 스마트시티
- 왜 공간(지역사회)인가?
 -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 지역단위 공간이 왜 중요한가?
 - 지역사회는 생활단위 ‘공동체’임. 육아문제는 상당부분은 ‘고립’에서 비롯됨
- 자동적으로 교류가 일어나는가?
 - 육아친화적 공간 구성(하드웨어)을 바탕으로 교류와 활동(소프트웨어) 결합
- 어떠한 지역사회 역동을 기대하는가?
 - 정부 + 지방정부 + 공공기관(어린이집 등) + 부모 + 주민(주민조직체)
 - 영아 + 유아 + 초등학생들의 삶(돌봄+교육+놀이+보건+복지+문화+생활 등)
- 왜 스마트시티인가?
 - 스마트시티는 미래 기술혁신이 결합된 지역사회 의미
 - 과학+생활+일터+공동체의 결합: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의 질 높은 지역사회 공간 창출 가능

- 27 -

감사합니다.

- 28 -

건강한 출생을 위한 임신 출산지원정책



한국모자보건학회

한 정 열

hanjungyeol055@gmail.com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국회의원회관 창립총회, 11월 28일)

저출생 Big Data :

저출생 정책의 재구조화 필요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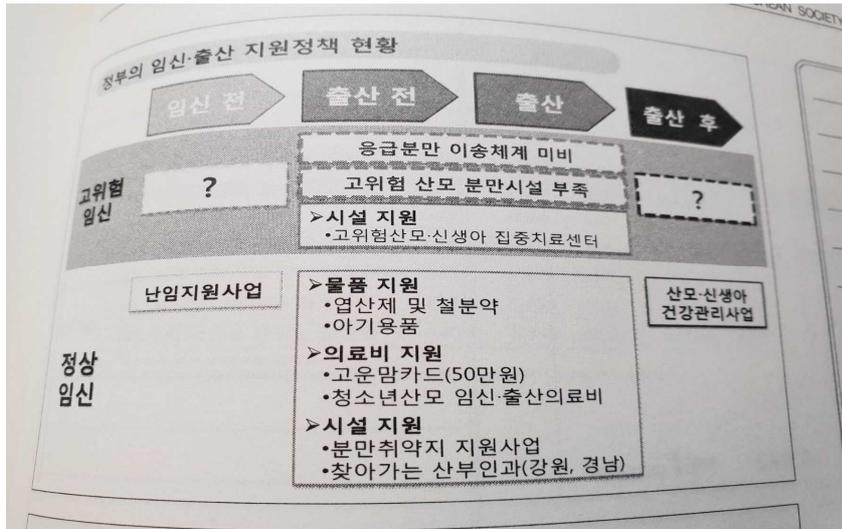
합계출산율 추이



1. 결혼 출산에 대한 국민인식(독박육아, 비혼, N포세대) 변화 위한 정책 필요
2. 성 평등 정착 위한 제도(경력단절방지, 출산 이후 여성의 원활한 직장생활) 개선 필요
3. 임신, 출산, 보육정책(임신출산 병원비 보험적용확대, 육아수당 및 아동수당

현실적 수준으로 지원) 강화 및 확대 필요

정부의 임신 출산 지원 정책



충분할까요!!!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2015

I. 건강한 임신을 위한 패러다임의 이동 필요

사례

37세 임신 5주 3일
 간질 치료를 위해 데파킨 (Sodium valproate)
 하루에 600mg 복용 중 산부인과 외래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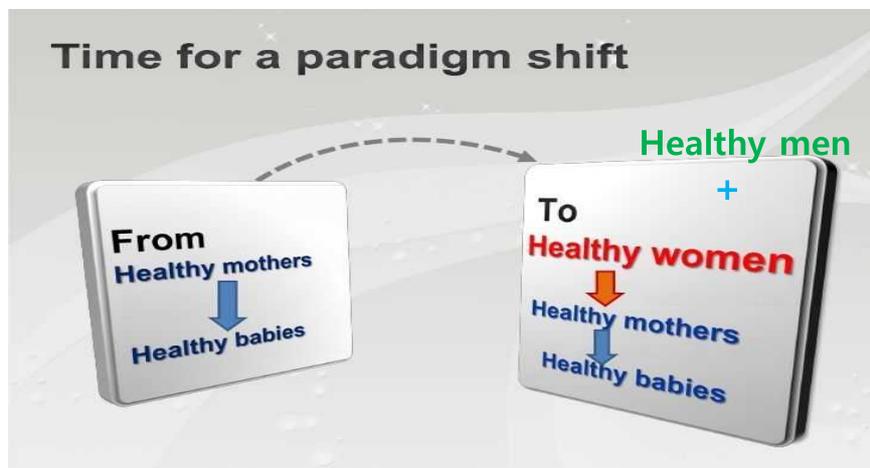


신경관결손증 (Neural Tube Defect) 발생



임신 20주(척수수막류)

남녀 임신 준비 프로그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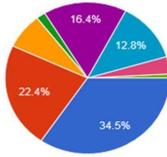


2018년 서울시 남녀임신준비프로그램사업

시범운영 보건소



2) 나는 즐거오던 것들을 현재도 즐기고 있다.
응답 2,505명



여성의 우울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0-7	1249	79.0	84.2
	8-10	185	11.7	96.6
	11-20	50	3.2	100.0
합계		1484	93.8	
결측	시스템 결측값	98	6.2	
총합계		1582	100.0	

혈액검사결과



The effects of preconception examinations on birth defects: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in Dongguan City, China.

RESULTS:

The incidence of birth defects in the screening group was 134.55/10000, while that in the control group was 241.53/10000. Preconception examinations can effectively **reduce the incidence of birth defects (BDs)** (RR: 0.557, 95%CI: 0.520-0.597).

임신 전 준비 프로그램 적용 시

선천성기형아 발생률 44.3% 줄임

국내 35만명 출생 시

연간 5,000명 기형아발생예방

J Matern Fetal Neonatal Med. 2018 Dec 6:1-141

II.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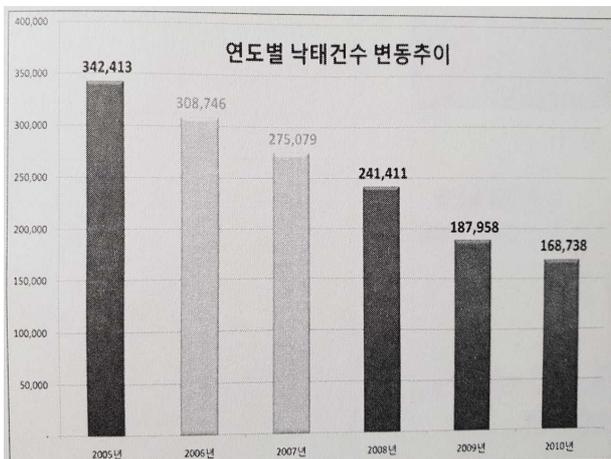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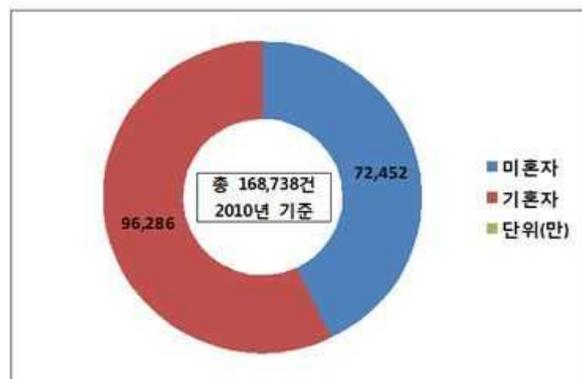
애 하나를 지운다는 느낌이 그렇더라구요, 애 하나를 지운다는 느낌
이요, 그냥 생긴 애 필요 없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낙태하는데
이 기분이 아니고, 죄책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살인하는 느낌 딱 그
거였거든요, 어쨌건 생긴 생명이고,

강명선, 양성은(2011). 여성의 낙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인공임신중절(낙태)



15-44세 가임 여성 1,000명당 약 15.8건



인공임신중절현황

(출처: 전국인공임신중절변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0)

불안전 유산(Unsafe abortion)

- 불법인공임신중절은 불안전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지며 모성사망 원인의 13%를 차지함
- 전 세계적으로 연간 불안전 인공임신중절로 4,700명이 사망하고, 약 5백만명이 난임
포함하여 일시적, 영구적 장애를 겪음

(WHO, 2012)

전통 가톨릭국가 아일랜드 : 낙태금지 헌법조항폐지 국민투표



67% 찬성으로 통과, 2018.5.25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

	여성의 생명 지킴	육체적 건강 지킴	정신적 건강 지킴	강간 또는 근친상간	태아기형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	요구에 의해
선진국	96	88	86	84	84	80	69
개발 도상국	97	60	55	37	34	19	16

World abortion polices 2013

인공임신중절예방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

	피임·임신 출산 남녀공동 책임의식 강화	양육의 남성 책임 의무화 법·제도 신설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 위한 성교육 및 피임 교육	출산·양육 사회 경제적 지원	인공임신 중절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	인공임신 중절 의료비 지원	다양한 가족 차별 인식 제거
미혼(%)	73.5	60.5	49.3	40.8	36.6	26.6	11.3
기혼(%)	71.4	54.8	62.1	44.1	37.8	17.7	11.8
전체(%)	72.5	57.9	55.2	42.3	37.2	22.5	11.5

2018 국내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한국마더세이프: 임신부 약물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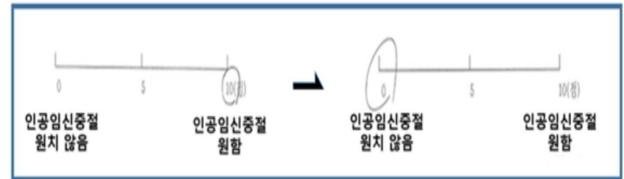


보건복지부지원사업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운영 : Cost-Benefi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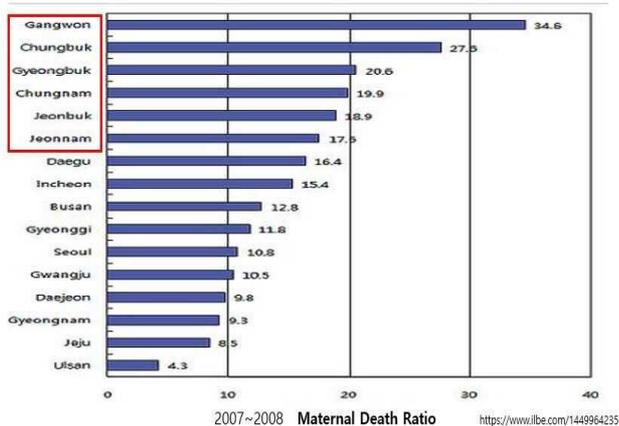
- ✓ 2010~2014년 : 12억원 비용
- ✓ 24,807례 약물 등에 노출된 임신부 상담
- ✓ 상담에 의해 임신 유지로 전환율: 35%
- ✓ 출생아 1인당 생산유발효과 13억원
- ✓ 출생 아이들에 의한 생산유발효과 : 8조6천억원



한정열 등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15

III. 안전한 출산 인프라 네트워크 필요

지역 : 모성사망률



서울 : 제일병원, 저출산에 끝내 폐업

사회
분만 가능한 병원 10년새 절반으로

2006년 1,119곳 → 2016년 603곳
1119곳 → 603곳으로 46% 줄어들어... 출생이 감소·대형 전문병원 증가



2006년(출산 43만 7천명) 1,119곳
2016년(출산 40만명) 603곳
2017년(출산 35만 7천명) 520여 곳



임신부 중심의 임신부 케어 네트워크 필요?

Texas
Pregnancy
Care
Network

임신부 중심이면서 의료공급자와 연계된 임신부 케어 필요?



임신부·출생아 통합 등록 시스템의 이점

- 임신부 관리 체계화 – 임신결과(출산, 자연유산, 인공유산), 취약지, 취약계층, 고위험군 등
- 영 유아 및 아동의 인권보호(매매, 불법적 입양)
- 생애주기 별 건강관리 사업체계화
- 모자보건지표(영아사망률, 모성사망률) 및 인구동태통계 가능
- 정보의 통합 수집과 관리로 행정절차의 간편으로 중복 비용 줄임과 효율적 활용가능
- 임신부 및 출생아의 정보를 이용한 연구로 모자보건증진
- 저출산 대책 및 인구의 질 향상 기여

정리

I. 건강한 임신을 위한 태러다임의 이동 필요 :

가임 남녀의 임신 준비 선택이 아닌, 필수

II.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 확대 , 정보제공

III. 안전한 출산 인프라 네트워크 필요

임신부 중심의 출산 인프라 네트워크, 임신부·출생아 등록

한국유아교육학회

미래사회의 주역,

영유아 돌봄-교육 통합지원정책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최일선

목차

Contents 1

유아교육 동향

Contents 2

돌봄·교육 지원정책 현황

Contents 3

돌봄·교육 통합지원정책 방향

I. 유아교육 동향

1. 유아교육 대상 연령의 확대

➤ UNESCO(2012)

- 2011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Level 0 단계(Early childhood education) 2개의 하위단계로 구분
 - ISCED 01 (0-2세): Early Childhood Education Development
 - ISCED 02 (3-5세): Pre-primary education

* 한국표준교육분류 (2013)

대분류	기존	대분류	개정	
0	취학 전 교육(3세이상)	0	영유아 과정 (유치원/어린이집)	영아발달
				유아교육·보육

2. 유아교육의 질 강조

➤ OECD(2012)

- 정책목표와 규정마련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학습기준 개발 및 실행
- 유아교육의 질 모니터링 및 질 관리 체제 강화
- 교사 자격 기준, 교사양성 및 재교육 강화(전문성 발달),
교사근무여건 개선

➤ **HECDI (Holistic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dex)**

- HECDI(총체적 유아기 발달 지표)는 UNESCO에서 국가 및 지방 정부가 유아기 발달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 가족 상황 평가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6가지 영역(건강, 영양, 평등, 교육, 빈곤, 부모 양육)과 총 25가지 지표로 구성

▪ **HECDI의 주요 목표(UNESCO, 2014)**

- 유아들은 연령에 적합한 발달과 학습을 가진다.
- 유아들은 가정환경 속에서 적절한 자극을 받고, 정서적인 지지를 경험한다.
- 유아들과 가족은 건강관리, 좋은 영양, 교육, 사회적 보호를 위해 좋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접근한다.
- 유아들의 권리는 유아들과 가족을 돌보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호되고 수행된다.

➤ **UN(2016): 2030 SDG(SDG: Sustainable Developmental Goals)**

- 빈곤퇴치 포함한 포용성, 보편성, 평등 등의 새로운 기조 강조하면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로 17개 영역 선정



- **SDG Target 4.2**

2030년까지 취학 전 모든 남아와 여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 하여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

- **글로벌 지표**

4.2.1.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아동의 비율(성별)

4.2.2. 초등학교 입학 전 기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참여율

➤ **Putrajaya Declaration**(문무경, 2016)

UNESCO의 ‘만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과 유엔아동권리헌장 근거하여 ‘교육은 출생부터 시작’(Learning begins at birth)’을 표명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교육부문(SDG 4) Target 4.2 성취 위한 아태지역의 우선적인 9가지 실행 과제와 전략 명시

→ 유아교육과 보육은 모든 사람의 책임(ECCE is everyone’s responsibility)이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형평성과 질 보장하기 위한 공적 투자, 법과 규정 설정, 교육과정 및 질 관리 등에 책무성이 있음.

* 푸트라자야 선언문 - 아태지역 유아교육과 보육의 실행과제 (문무경, 2016)

1. 초등학교 직전 최소한 1년의 양질의 무상교육을 실현하도록 (특히, 가장 취약소외계층의 유아에 각별한 관심을 두어) 법과 정책,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한다.
2. 건강, 보호, 위생, 정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여러 부처 간의 통합적인 정책과 전략, 양질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3. ECCE 교직원의 지위와 근무여건 등을 개선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명료한 정책, 전략, 지침, 실행전략을 개발한다.
4.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하며 양질의 통합된 ECCE 프로그램과 서비스, 지원체제 (특히 장애가 있는 유아와 가족 지원을 위하여)를 설계한다.
5. ECCE에 대한 정부투자를 증대하고, 서비스 접근성의 형평성 및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자원 및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립부문,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6. 학습준비도(영유아 발달 및 학습 성과), 취원율, 이용가능한 서비스 및 공적, 사회적 재원에 대한 국제지표를 사용하여 국가 및 지역수준에서 SDG 4.2의 진전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7. 유아발달과 학습성과에 대한 총체적 측정의 복잡성과 형평성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와 분산되어 있는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활용을 강화한다.
8. SDG 4.2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국제기구(유네스코, 유니세프, ARNEC), 여타의 아태지역 기구 및 네트워크와 공조하여 주요 관계자들의 인식을 증진한다.
9. SDG 4-Education 2030을 위한 아태지역의 조정 및 지원 기제하에 실행시기를 명시한 국가수준의 로드맵과 SDG 4.2 달성을 위한 아태지역의 틀(framework) 개발에 착수한다.

* 시사점

➤ 국가의 공공성-책무성 강화

- 정책수립(공적 재정, 교원양성 및 수급), 법 제정, 기관 시설 조성 등

➤ 유아교육의 질 관리 및 시스템구축

- 교육과정, 교사처우 및 자격, 질 모니터링 및 평가 등

➤ 부모지원 강화

- 부모양육지원, 부모교육강화, 가정양육환경조성 등

➤ 신뢰-협력적 관계구축

- 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서(처) 간의 신뢰-협력 강조

II. 돌봄·교육 지원정책 현황

1. 유아교육 관련 주요국정과제(국가기획자문위원회, 2017)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전략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 출산 극복 (보육·양육 지원 강화/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구현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조성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2. 공공성강화를 위한 유아교육혁신방안(교육부, 2017)

-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2조 587억 원)
-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 2018학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
- 다문화유아 지원 확대: 다문화유치원 '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17년 90개원) 및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배포
- 특수유아의 사회통합 지원: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대('17년 731개 학급 → '22년 1,131개 학급)하고,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 설립 예정
- 공립 유치원 확대 및 여건개선: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추진

비전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	
목표	□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유아교육 및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보장 유치원,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발달 지원 교육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추진 과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한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실현 ▪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패러다임 전환 ▪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 교육환경 조성 ▪ 학부모 참여 강화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유아와의 상호작용 강화
	유아교육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 적합한 평가체계 마련 ▪ 사립유치원 행정지원 체계 개선
추진 체계	교육부-교육청-현장(유치원, 교사, 학부모), 관계부처(기관) 간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돌봄 지원 관련사업

주관	사업내용	
서울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우리 동네의 다양한 육아 자원을 발굴하여 양육자에게 One-Stop 으로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지원서비스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사업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	공동육아 나눔터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다른 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 제공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센터	6-12세 초등학생 중심의 상시, 일시, 등·하원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교육부와 관계부처(복지부·행안부·여가부)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확대계획

III. 돌봄·교육 지원정책 방향

1. 생애주기별 (ISCED 기준) 맞춤형 지원정책

- 영아의 경우: 발달적 요구에 기초한 가정중심의 돌봄·교육 지원강화
 - 영아 및 부모의 발달적 요구에 기초한 지원
 - 가정양육의 중요성 및 부모의 인식변화
 - 부모의 육아권 보장
 - 부모의 양육참여지원
 -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지원 (부모효능감)
 - 긍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지원

➤ 유아의 경우: 발달적 측면과 함께 교육권 보장 위한
기관중심의 돌봄·교육 지원강화

- 유아의 발달적 지원과 교육권 보장
- 우수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
- 기관유형간 교육격차 해소
- 미래형 교육환경 및 시설 구축
- 교사의 자격 기준 강화 및 처우 개선
- 부모의 기관 접근권과 선택권 확보

2. 합리적인 재정 지원정책

➤ 공공성 측면

- 기회균등 및 형평성 제고
- 부모의 적정비용 검토

- 유니세프본부 아동연구 조사기관-이노첸티 연구소 보고서(국민일보, 2018).
 - 영 유아 교육 평등 정도: OECD 41개국 중 35위로 하위권 기록
 -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1년 전까지 제도화된 유아교육을 받는 대한민국 영 유아 비율: 90.8%로 41개 선진국 중 35위.
(멕시코: 99.3%/ 리투아니아: 99.5%)

➤ 효율성 측면

- 지원사업관련 투자 효과성 검증/평가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재정 투자 위한 통합적 수급 계획 수립 및 시행 연동시스템 구축
- 부서 및 부처간 상호 예산 조정 및 협력

3. 행복한 돌봄·교육을 위한 질 관리 정책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아의 행복한 삶의 질과 권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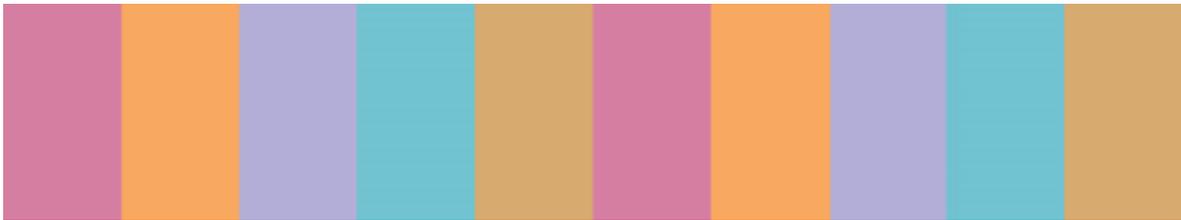
- 질 높은 ECEC 서비스 질의 정의 및 구성요소에 대한 합의와 일관성 있는 질 관리(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질 관리(모니터링)의 결과에 기초한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강화
- 질 관리(모니터링)의 이행과 결과의 효과적인 반영을 위하여 정부-지자체 간의 체계적인 역할분장

4. 효율적인 돌봄·교육을 위한 행정지원정책

- ▶ 시·도별, 교육청 별, 행정부처별로 분산되어 실행하고 있는 돌봄·교육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행정지원시스템 구축
 - ▶ 돌봄·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육아정보 포털서비스시스템마련
- 유아-부모 맞춤형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여 돌봄-교육 만족도 향상 기대 / 중복사업 방지를 통한 비합리적인 재정지출 방지 효과 기대

참고문헌

- 교육부(2017. 12. 27).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 국민일보(2018. 10.30). 한국 영 유아 교육 평등, 멕시코 칠레보다 낮아...41개국 중 35위.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5개년 계획.
- 문무경(20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과제 푸트라자야 선언문 (Putrajaya Declaration)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Brief*, 54. 1-4.
-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 OECD(2017). *Education at a Glance*. OECD Publishing.
- UNESCO(2012).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2011.
- UNESCO(2014). *Holistic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dex (HECDI) framework: A technical guide*.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29188>.
- United Nation(2016).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United Nations Pub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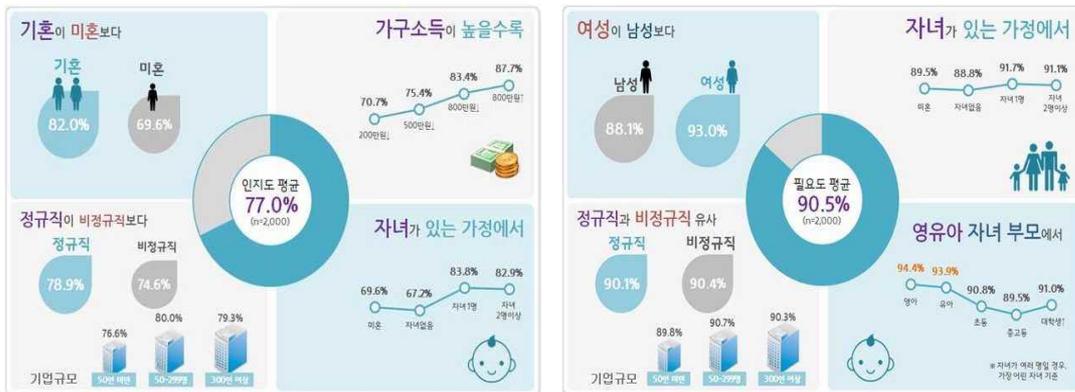


출산 육아 친화적 기업과 사회환경 조성 방안: 사각지대 해소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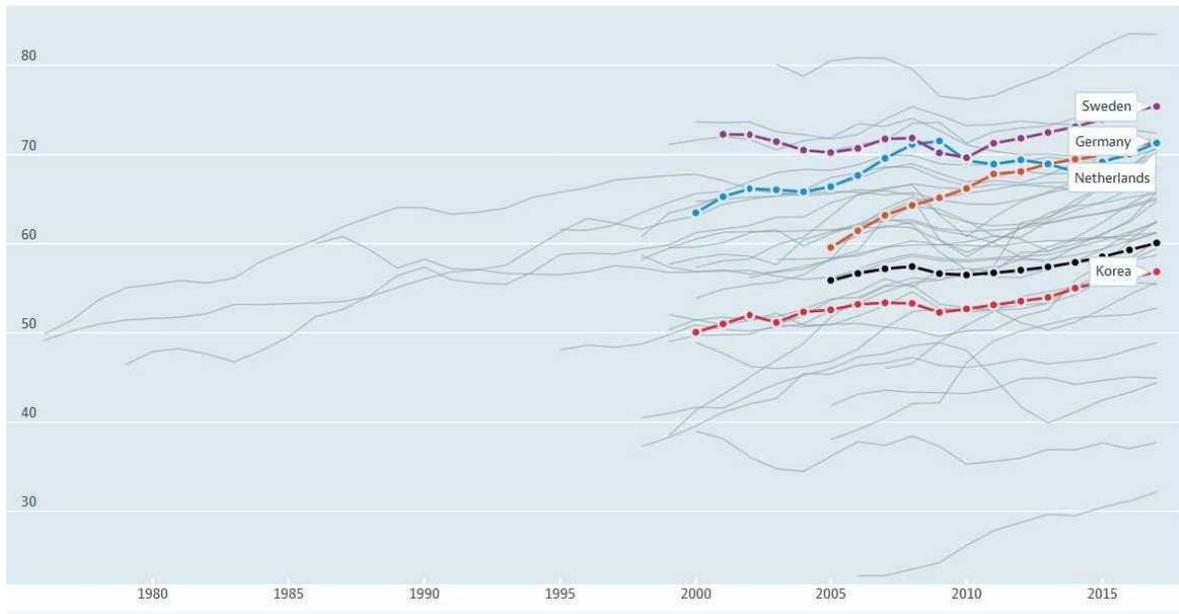
이재희



일가정양립과 여성고용



일가정양립과 여성 고용



자료: OECD 여성고용률 추이(<https://data.oecd.org/emp/temporary-employment.htm>, 2019년 1월 24일 인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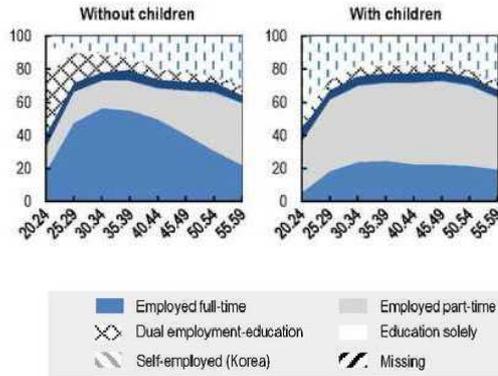


출처: <https://www.smh.com.au/opinion/the-male-breadwinner-is-an-outdated-relic-20160726-gqdzo4.html>(2019년 1월 24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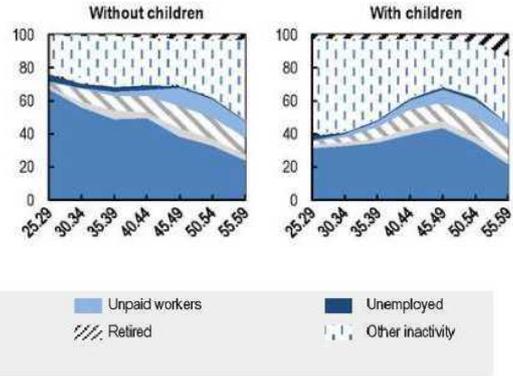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을 전제로 한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양립제도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출산과 여성고용

B. Netherlands: Intensive use of part-time by m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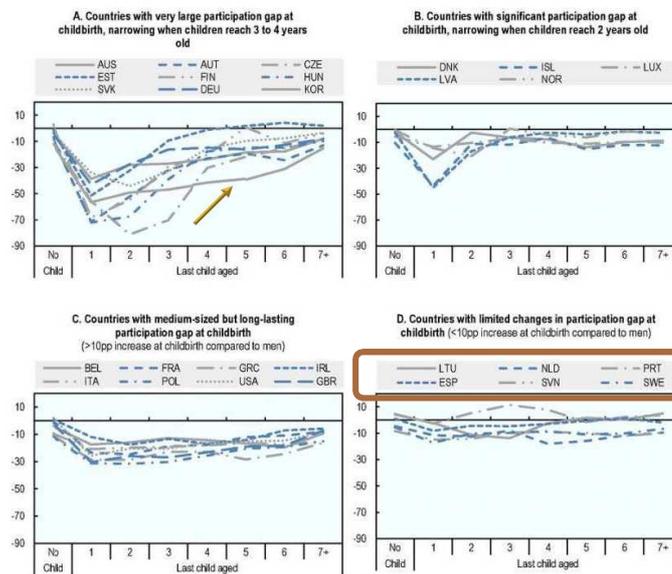
E. Korea: Strong attachment to the labour market before childbirth, delay in fertility decisions, second working career of mothers



출산과 여성고용

Figure 6.9. Withdrawal from the labour market at childbirth can have long-lasting effects on women's careers

Percentage point marginal effect of childbirth on the participation gap of mothers (by age of their youngest child) as compared to men and non-mothers, 2006-15



제도 사각지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종사자 규모	성별											
	합계				남자				여자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합계	9,525,720	78.2	2,648,671	21.8	5,700,688	82.1	1,243,465	17.9	3,825,031	73.1	1,405,206	26.9
1~4명	948,127	45.3	1,145,011	54.7	469,772	47.5	519,385	52.5	478,355	43.3	625,626	56.7
5~9명	1,613,964	71.1	654,448	28.9	821,833	71.5	327,479	28.5	792,131	70.8	326,969	29.2
10~29명	2,273,372	83.2	457,473	16.8	1,345,221	85.2	233,834	14.8	928,151	80.6	223,639	19.4
30~99명	1,911,395	87.7	267,566	12.3	1,193,631	91.9	105,298	8.1	717,764	81.6	162,268	18.4
100~299명	1,229,689	94.7	69,245	5.3	770,550	96.2	30,813	3.8	459,139	92.3	38,432	7.7
300명이 상	1,549,173	96.6	54,928	3.4	1,099,682	97.6	26,655	2.4	449,491	94.1	28,272	5.9

출처: 이재희, 도남희, 엄지원(2018) 출산 육아친화적인 근로환경조성을 통한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주: 통계청(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7년 8월)를 연구진이 분석한 자료

김석영·최장훈·이정택·기승도·김경환·장동식·박정희(2015)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가입률의 경우 2012년도에는 0.2%, 2013년도에는 0.8%, 2014년도에는 0.6%였으며 가입유지율은 2012년~2014년도까지 0.3% 정도임

모성보호제도 실제사용가능성

모성보호제도 사용 가능성

구분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출 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태아검 진시간	임신 중 시간외 근로 금 지	임신 중 위 운 종류 근 로로 전환	임신 중 유해·위험 직종 근무 금지	임신 중 야간 휴 일근로의 제한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전체	56.1	37.1	35.2	43.5	40.5	30.3	47.1	50.7	45.0	31.2	
자녀 유무	없음	55.5	35.8	35.4	44.1	40.9	27.2	44.9	49.6	42.1	29.5
	있음	56.4	37.6	35.1	43.3	40.3	31.6	48.0	51.2	46.1	31.9
근로 형태	정규직	69.2	42.9	43.6	49.4	47.5	33.4	51.8	59.1	53.8	33.9
	파견/용역/특 수	40.4	26.9	26.9	32.7	23.1	23.1	30.8	30.8	28.8	21.2
	기타 비정규직	45.0	32.7	28.0	38.9	35.1	28.0	43.8	44.7	38.3	29.8
사업장 규모	20인 미만	33.8	24.3	23.5	36.0	31.6	29.6	39.7	41.9	27.4	23.7
	20~299인	67.0	40.3	36.9	43.4	39.7	26.8	47.3	51.5	49.9	31.8
	300인 이상	79.9	56.9	55.7	59.2	60.3	39.1	62.1	67.2	71.3	45.4

출처: 이재희, 도남희, 엄지원(2018) 출산 육아친화적인 근로환경조성을 통한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주: 1) 실제 제도가 있고 사용 가능성이 보통 이상인 비율
 2) 조사대상: 결혼한 취업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 2017년 근로환경조사 결과: 차별경험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 모성보호제도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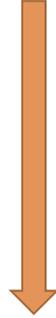
구분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태아검진 시간	임신 중 시간외 근로 금지	임신 중 쉬운 종류 근로로 전환	임신 중 유해·위험 직종 근무 금지	임신 중 야간 휴일 근로의 제한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전체	51.0	62.3	59.2	44.9	48.1	55.3	43.6	45.1	61.5	60.9
사업장 규모	20인 미만	54.2	66.7	58.9	40.8	46.0	53.5	40.6	47.4	59.6
	20-299인	51.7	63.4	62.8	46.2	49.5	56.0	46.5	46.0	66.2
	300인 이상	45.1	54.4	53.5	48.4	48.4	56.8	42.7	39.9	55.0

출처: 이재희, 도남희, 엄지원(2018) 출산 육아친화적인 근로환경조성을 통한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주: 조사대상: 결혼한 취업여성

정책방향 및 논의점

➤ EU 일가정양립 및 육아지원 정책 방향

Ideal type	Childcare service coverage	Formal childcare time	Public financial support
Male breadwinner	Low	Full-time or part-time	Low
Caregiver parity	Low	Full-time	Low or high
One-and-a-half breadwinner	High	Part-time	Low
Universal breadwinner	High	Full-time	Low or high
Universal caregiver	High	Part-time	High



➤ 남성생계부양 모델 탈피

- 가족내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설계 및 사회문화 조성

정책방향 및 논의점



정규직형 시간제 일자리



육아휴직제도 강화 및 보육시설 확충

정책방향 및 논의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취업자 중심으로 개정 필요

-> 일가정양립제도 사용에 대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금지 조항 추가

정책방향 및 논의점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강화 모색

- 고용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일반회계에서 지원 방안) -> 두루누리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등 사각지대 취업자 지원강화

- 건강보험 활용 방안(모성 휴가급여)

- 부모 모험 도입?

▶ 중소기업을 위한 일가정양립 제도 마련

- 중소기업 일가정양립제도 관련 장려금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육아휴직(단축근로) 모형 설계



Thank You

